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차 례

1. 최근 독일경제 현황
2.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
3. 독일 연방정부의 대응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여력 제한, ICT 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 에너지 전환 비용 등 정책 및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음.
- ▶ 독일 연방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17억 유로(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간소화를 포함한 「성장기회법」을 제언함.
 - [수출입 다변화] 중국 등 대외수요 감소의 자국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상대국 다변화를 모색함.
 - [숙련노동자 유치] 「전문인력이민법」 제정을 통해 해외 숙련노동자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 개선]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해가는 한편,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재생에너지 확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병행해야 함.
 - [외국인정책 정비] 주요 선진경제권에서 숙련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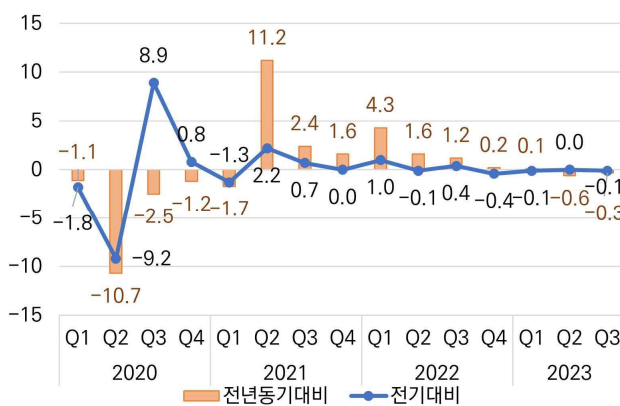
1. 최근 독일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독일은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4/4분기부터 현재까지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전기대비 GDP 성장률은 2022년 1/4분기 1.0%를 기록한 이후 0%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2022년 4/4분기, 2023년 1/4분기에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그림 1, 표 1 참고).
 - 2023년 2/4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0.1%를 기록하여 정체 또는 후퇴가 이어지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 지출항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부터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무역 등이 모두 부진하여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근 들어 투자만 소폭 회복하였음.
 - 2023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0%로 나타났고, 정부지출 역시 전기대비 0.1% 성장에 그침.
 - 총투자는 직전 2분기 연속 감소하였다가, 2023년 2/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1% 증가함.
 - 2023년 2/4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1.1% 감소하고 수입은 정체하여 순수출이 감소함.
- 월별 무역 규모를 살펴보면, 팬데믹 초기 이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입은 2022년 중반부터 정체, 또는 감소하였으며, 현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중이나 최근 흑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2022년 원자재, 에너지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 회복하였으며, 최근 6월부터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다시 줄어들고 있음.
 - 2023년 8월의 수출 규모는 1,279억 유로, 수입 규모는 1,114억 유로, 무역수지는 166억 유로 흑자임.

그림 1.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주: 2023년 3/4분기 자료는 속보치임.

자료: Destatis(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lungen/2023/08/PD23_336_811.html;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10/PE23_420_811.html, 검색일: 2023. 10. 30).

그림 2. 독일의 월별 무역 현황

(단위: 십억 유로, 계절 조정)



자료: Destatis(<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Aussenhandel/kah612.htm>; <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Aussenhandel/kah611.html>; <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Aussenhandel/kah613.html>,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10. 13).

표 1.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국내총생산	1.0 (4.3)	-0.1 (1.6)	0.4 (1.2)	-0.4 (0.2)	-0.1 (0.1)	0.0 (-0.6)
민간소비	0.6 (8.4)	0.2 (6.0)	0.7 (1.8)	-1.0 (0.2)	-0.3 (0.2)	0.0 (-1.2)
정부지출	1.4 (4.5)	-0.1 (1.6)	-1.1 (0.1)	-0.2 (0.1)	-1.9 (-3.4)	0.1 (-3.1)
총투자	2.6 (-0.1)	1.6 (-1.0)	2.3 (9.0)	-0.4 (4.9)	-1.7 (1.1)	2.1 (2.7)
수출	-0.1 (4.6)	0.9 (3.7)	1.0 (5.3)	-1.1 (-0.2)	0.4 (1.8)	-1.1 (-1.6)
수입	0.1 (7.1)	2.4 (7.8)	1.8 (10.3)	-1.7 (1.8)	-1.5 (1.2)	0.0 (-1.8)

주: 전기대비 변동치 기준,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변동치 기준. 2023년 3/4분기 속보치는 국내총생산 -0.1%(-0.3%)로 나옴.
 자료: Destatis, "Verwendung des Bruttoinlandsprodukts"(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Volkswirtschaftliche-Gesamtrechnungen-Inlandsprodukt/Tabellen/bruttoinlandsprodukt-verwendung-viertel-jahre.html, 검색일: 2023. 10. 12).

■ [경제전망] 해외 주요 경제기관의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경제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IMF(2023. 10), OECD(2023. 9) 및 EU 집행위(2023. 9)는 2023년 독일 예상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0.2%, -0.4%로 발표하여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함(표 2 참고).
 - IMF 전망 기준, 유로존 0.7%, 프랑스 1.0%, 이탈리아 0.7%, 영국 0.5% 등으로 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미국(2.1%)이나 한국(1.4%)에 비해 낮은 편이며, 독일경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4년에 독일경제는 0.9~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3년 역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회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르다고 볼 수 없음.
 - 주요국 중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독일보다 낮은 국가는 영국 및 이탈리아뿐임.

표 2. 주요 경제기관의 2023년, 2024년도 독일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전년대비 %)

국가	2022	IMF 2023. 10		OECD 2023. 9		EC 2023. 9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독일	1.8	-0.5	0.9	-0.2	0.9	-0.4	1.1
프랑스	2.5	1.0	1.3	1.0	1.2	1.0	1.2
이탈리아	3.7	0.7	0.7	0.8	0.8	0.9	0.8
스페인	5.8	2.5	1.7	2.3	1.9	2.2	1.9
유로존	3.3	0.7	1.2	0.6	1.1	0.8	1.3
영국	4.1	0.5	0.6	0.3	0.8	-	-
미국	2.1	2.1	1.5	2.2	1.3	-	-
한국	2.6	1.4	2.2	1.5	2.1	-	-
세계	3.5	3.0	2.9	3.0	2.7	-	-

자료: IMF(2023. 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23. 9), Economic Outlook; EC(2023.9), Summer 2023.Economic Forecast.

■ [물가상승률]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¹⁾은 팬데믹 회복 국면 중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2년 10월 최고치(11.6%)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9월 4.3%까지 낮아짐(그림 3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이 2022년 가파른 물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감소함.
 - 2023년 8월 5.3%에 이르던 에너지 가격상승률은 9월에는 -0.8%로 하락하여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상승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023년 3월 18.6%까지 이른 식음료/주류/담배 가격상승률은 9월에 8.1%로 하락함.
- 식음료/주류/담배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최근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23년 9월에 4.8%로 상승폭이 감소함.
 -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안정으로 인해 2023년 9월 근원물가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4.3%)보다 높아짐.
 - 2022년 9월 '9유로 티켓' 정책²⁾ 및 유류세 인하 중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물가 상승폭이 커졌으며, 올 9월의 물가상승폭 감소는 전년동월의 상승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임.
 - 기저효과로 인한 9월 수치를 제외하면 근원물가상승률은 5~6%대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물가상승률과 달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음.

■ [실업률] 2023년 독일의 실업률은 5%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4 참고).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6.4%까지 상승했던 독일의 실업률은 2022년 5월 팬데믹 이전 수준인 4.9%까지 하락한 후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5%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23년 9월 실업률 5.7%를 기록함.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2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던 실업자 수가 2022년 4월 약 23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후 소폭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261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림 3.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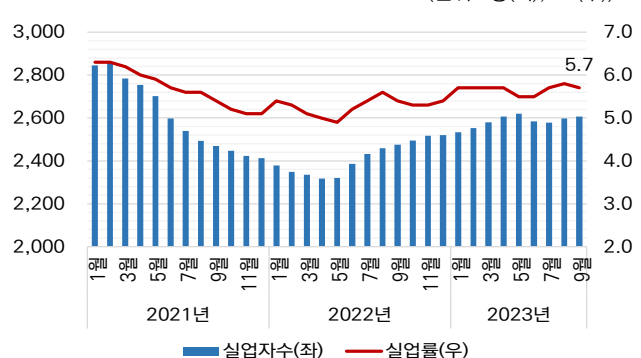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좌), %(우))



주: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사용.
자료: Eurostat(prc_hicp_manr, prc_hicp_inw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23. 10. 16).

그림 4. 독일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단위: 명(좌), %(우))



자료: Destatis(<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Arbeitsmarkt/arb210a.html>, 검색일: 2023. 10. 13).

1) 본고의 물가상승률은 유로존 공동바스켓으로 계산된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의 증가율을 의미함.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HICP를 기준으로 집행되며,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수치상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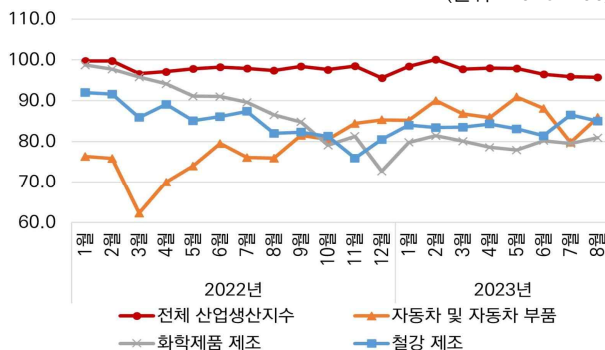
2) 월 9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한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증가로 인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됨. 장영욱 외(2022), 「유럽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2-23.

■ [산업생산 및 주문] 산업생산지수는 2023년 4월 이후 작은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주문지수는 약한 회복세를 보임.

- 2023년 1월 100.1까지 상승했던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8월까지 95.7로 하락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지수는 2022년 3월 62.3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80~90 사이의 저조한 수치를 보임.
 - 화학제품 및 철강 생산지수 역시 전체 산업 지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있음.
- 경기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2022년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 들어 월별 변동성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2023년 8월에 100.4로 전월대비 3.8p 상승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신규주문지수는 전월대비 0.7p 하락한 94.4를 기록함.
 - 전체 산업주문지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주문지수는 2023년 5월 이후 전체 주문지수 추세를 역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산업생산지수

(단위: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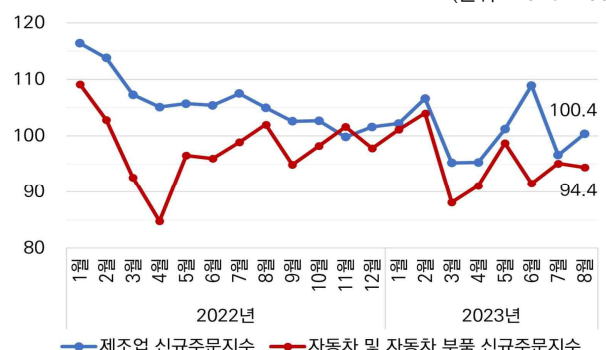


주: 계절 및 달력 조정.

자료: Destatis(<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Produktion/kpi111.html>); Genesis-online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23. 10. 13).

그림 6.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단위: 2015=100)



주: 계절 및 달력 조정.

자료: Destatis(<https://www.destatis.de/DE/Themen/Wirtschaft/Konjunkturindikatoren/Auftragseingang/kae211.html>); Genesis-online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23. 10. 13).

■ [정부재정] 독일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대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0%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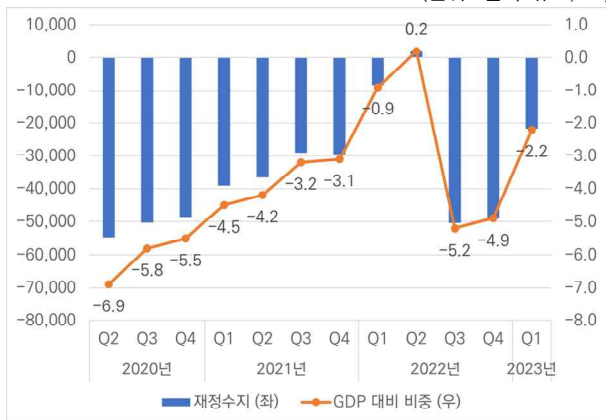
- 재정위기 이후 독일은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재정을 편성하였음.
 - 독일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고용유지, 소득지원 등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5,890억 달러의 재정(GDP 대비 15.3%)을 추가 지출함.³⁾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독일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비 보조, 유류세 인하, 소득보전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77억 유로(GDP 대비 4.4%)의 재정을 지출함.⁴⁾

3) IMF(2021. 10),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Fiscal-Policies-Database-in-Response-to-COVID-19>(검색일: 2023. 10. 19).

-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4분기 GDP 대비 7%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꾸준히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나, 에너지 위기 여파로 2022년 3/4분기 다시 적자폭이 커짐.
-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59.6%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69.3%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 2022년 정부부채 규모는 2조 5,631억 유로를 기록하며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규모는 66.3%로 하락함.

그림 7. 독일 재정수지 추이(분기별)

(단위: 십억 유로, %)



주: 계절조정 전 자료.

자료: Eurostat(gov_10q_ggnfa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23. 10. 18).

그림 8. 독일정부부채 추이(연도별)

(단위: 십억 유로, %)



자료: Eurostat(gov_10dd_edpt1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23. 10. 18).

2.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

가. 공급 요인

■ [에너지 가격 상승]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제조업 생산 및 운송 비용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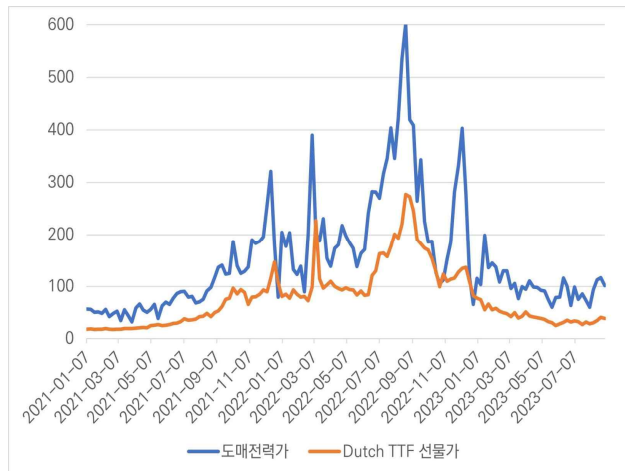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축소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으며, 2022년 9월 주간평균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276.75유로까지, 도매전력 가격은 601.78유로까지 상승함(그림 9 참고).
- 2021년 초 천연가스 최저 가격은 MWh당 31.97유로, 도매전력 최저 가격은 17.35유로였음.
- 2022년 겨울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이 형성되었음.

4) 에너지보조금 정책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관찰된 2021년 9월부터 시행됨. Bruegel(2023. 6), "National fiscal policy responses to the energy crisis," <https://www.bruegel.org/dataset/national-policies-shield-consumers-rising-energy-prices>(검색일: 2023. 10. 19).

- 높은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집약적 산업⁵⁾에서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운송 및 물류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줌.⁶⁾
- 에너지 위기 중 에너지집약 산업의 생산량은 팬데믹 기간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음(그림 10 참고).

그림 9. 천연가스 가격 및 독일 도매전력가격 추이

(단위: 메가와트시(MWh) 당 유로)



주: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지역 기준으로 사용되는 Dutch Title Transfer Facility(TTF) 선물가격으로 표시함.

자료: Statista, Dutch TTF gas futur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67202/weekly-dutch-ttf-gas-futures>; Ember DB, European Power Price Tracker, <https://ember-climate.org/data/data-tools/europe-power-pric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10. 19).

그림 10. 독일 부문별 산업생산지수

(2015=100)



주: 계절조정.

자료: IMF(2023. 7), *Country Report: Germany*, p. 80.

■ [노동시장 경색]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기업 생산비용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공급 부족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선진국에서 공히 관찰되는 노동시장 경색 문제가 독일에서도 동일하게 대두되었음.
 - 팬데믹 기간 중 해고, 조기은퇴, 병가 등으로 인해 취업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회복 국면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롱코비드(후유증)에 따른 업무 미복귀 등의 이유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됨.
 - 독일의 고용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경색이 관찰됨.⁷⁾
 - 2023년 2/4분기 독일의 공석률(job vacancy rate)은 4.1%로, EU 평균(2.7%)보다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2.3%), 이탈리아(2.4%), 스페인(0.9%) 등 주요국에 비해 더 높음.⁸⁾

5) 에너지집약적 산업에는 화학제품 제조, 금속 생산 및 가공, 원유 가공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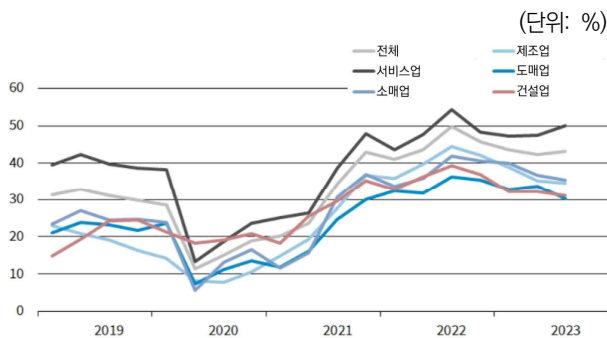
6) IMF(2023. 7), *Country Report: Germany*, p. 80.

7) *Ibid.*, p. 5.

8) 공석률은 기업의 구인수요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함. Eurostat(2023. 9),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Job_vacancy_statistics#Job_vacancies:_latest_developments(검색일: 2023.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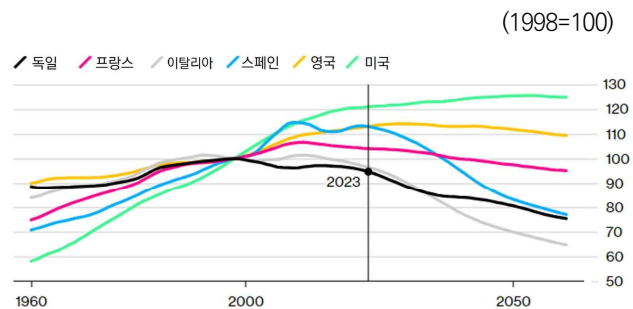
- 특히 숙련인력 분야의 노동공급 부족은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⁹⁾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독일기업 중 43%가 숙련인력 부족을 경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함(그림 11 참고).
 - 독일의 생산가능인구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그림 12 참고).

그림 11. 부문별 숙련인력 부족 기업 비중



자료: Ifo Business Survey(2023. 8), <https://www.ifo.de/en/facts/2023-08-16/germanys-shortage-skilled-workers-worsens-slightly>(검색일: 2023. 10. 20).

그림 12.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전망



주: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하며, 독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8년을 기준연도로 삼음.

자료: Bloomberg(2023. 6. 7),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3-06-07/germany-labor-force-to-shrink-ending-era-of-rising-prosperity>(검색일: 2023. 10. 20).

나. 수요 요인

■ [금리 인상]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 및 가계의 수요가 둔화됨.

- ECB는 2022년 7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Deposit facility rate)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4개월 만에 -0.5%에서 4.0%까지 4.5%p 증가함.¹⁰⁾
 - 최근 근원물가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10월 ECB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
-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기업 및 가계의 대출 감소, 투자 저하, 금융비용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독일 역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¹⁾
 - 독일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실질증가율은 2022년 1/4분기 이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 대출의 감소분이 컸음(그림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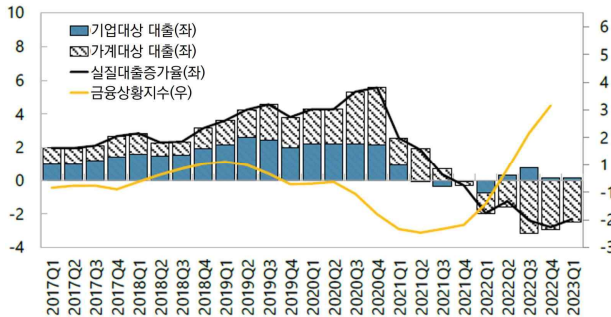
9) DW(2023. 5. 5), "Germany's labor crisis is an economic time bomb."

10) ECB,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검색일: 2023. 10. 26).

11) IMF(2023. 7), *Country Report: Germany*, p. 7, p. 17.

그림 13. 독일 대출증가율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단위: %(좌), 지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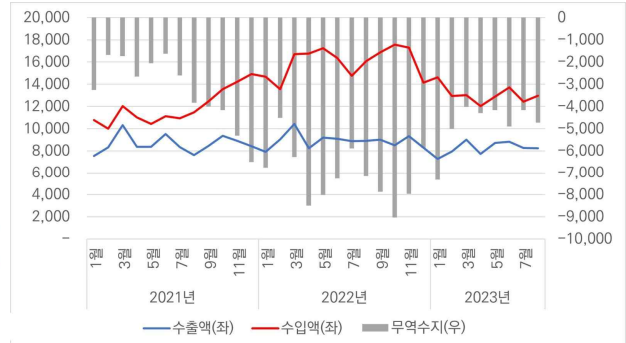


주: 금융상황지수는 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장단기 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0보다 클 경우 긴축적, 0보다 작을 경우 완화적 상황임을 의미함.

자료: IMF(2023. 7), *Country Report: Germany*, p. 8.

그림 14. 독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Die Datenbank. Destatis(<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 자료를 저자 재가공.

■ [대중국 무역적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증가하면서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은 독일의 제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수입과 수출을 합한 전체 교역액은 중국이 가장 높음(표 3 참고).
-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크게 늘며 2022년 10월 대중국 무역적자가 90억 유로를 넘었다가 2023년 들어 47억 유로 수준까지 감소함(그림 14 참고).
 - 상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액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여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 대중국 수출액은 2022년 3월 100억 유로를 넘었다가 2023년 8월 82억 유로까지 감소하였음.
- 중국의 고성장 국면에서 대중국 수출이 독일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향후 중국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국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 경기도 동반 후퇴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줄곧 적자였으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표 3. 2022년 독일의 최상위 10대 무역상대국

순 위	수출			수입		
	국가	수출액 (백만 유로)	비중 (%)	국가	수입액 (백만 유로)	비중 (%)
1	미국	156,190	9.9	중국	192,006	12.8
2	프랑스	116,034	7.4	네덜란드	119,516	8.0
3	네덜란드	110,612	7.0	미국	92,290	6.2
4	중국	106,879	6.8	폴란드	77,426	5.2
5	폴란드	90,555	5.7	이탈리아	72,307	4.8
6	오스트리아	88,684	5.6	프랑스	69,279	4.6
7	이탈리아	87,505	5.5	벨기에	62,479	4.2
8	영국	73,786	4.7	노르웨이	62,001	4.1
9	스위스	70,627	4.5	체코	58,643	3.9
10	벨기에	61,810	3.9	오스트리아	57,642	3.9

자료: Destatis(2023. 9. 12), "Order of rank of Germany's trading partners,"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Foreign-Trade/Tables/order-rank-germany-trading-partners.html>(검색일: 2023. 10. 26).

다. 정책 및 구조적 요인

■ [재정지출 여력 제한] 독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재설정으로 인해 재정 확대 여력이 부족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 시행에 한계가 존재함.

- 2023년부터 독일 연방정부는 「재정수지건전화법(Schuldenbremse)」을 재가동함.¹²⁾
 - 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하원이 부채상한제(debt brake)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으나, 2023년부터 재가동하여 2026년까지 연방재정의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음.
 - 「재정수지건전화법」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며, 주정부의 부채를 허용하지 않음.
-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재무장관은 ECB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수지건전화법」을 재시행한다고 밝혔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함.¹³⁾

■ [구조적 취약성] 독일경제는 ICT 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 에너지 전환 비용, 정치적 불안정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함.

-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데 반해 반도체,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 IMD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에서 독일은 19위로 덴마크(1위), 미국(2위), 스웨덴(3위), 네덜란드(7위), 한국(8위), 영국(16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함.¹⁴⁾
 -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독일은 종합 7위를 기록하였지만, ICT 분야의 경쟁력은 36위에 불과하였음.¹⁵⁾
 - 2023년 세계 전기차시장에서 독일기업인 폭스바겐(8%), BMW(4%), 메르세데스-벤츠(3%)의 점유율이 테슬라(미국, 13%), BYD(중국, 18%)에 비해 낮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¹⁶⁾
- 친환경 경제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축소, 원자력 발전 중단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전력 공급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함.
 - 독일은 전체 전력 생산의 6%(2022년 기준)를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을 2023년 4월 완전히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갈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2022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나, 원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¹⁷⁾

12) Zeit Online(2023. 7. 1), "Bundesregierung will Schuldenbremse wieder einhalten," <https://www.zeit.de/politik/2022-07/bundesh-aushalt-2023-christian-lindner-finanzplan>(검색일: 2023. 10. 16).

13) FDP(2022. 9. 19), "Schuldenbremse muss wieder eingehalten werden," <https://www.fdp.de/schuldenbremse-muss-wieder-eingehalten-werden>(검색일: 2023. 10. 16).

14)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https://www.imd.org/centers/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ness-ranking/>(검색일: 2023. 10. 21).

15)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16) IEA(2023), *Global EV Outlook 2023*, p. 97.

17)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3. 9), "Joint Economic Forecast Autumn 2023."

- 현 집권 연립정부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과 대안세력의 급부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향후 경기침체 극복 및 성장동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¹⁸⁾
 -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현 연립정부는 정당간 이견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정책, 경기 부양책, 이민정책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¹⁹⁾
 -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인기가 높아지며 최근 주의회선거에서 득표율이 급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권당의 기후변화 대응, 이민자 유치 등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워짐.²⁰⁾

3. 독일 연방정부의 대응

- [역내 경쟁력 강화 및 다변화] 독일 연방정부는 역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또는 다변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기금] 연방정부는 2,118억 유로 규모의 기후변화기금(KTF: Klima-und Transformationsfonds) 조성 계획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함.²¹⁾
 - 2024~27년 기간 기후변화기금 운영을 통해 수소경제, 반도체산업, 청정에너지, 기후친화적 모빌리티, 디지털 인프라, 건물 리모델링 등 미래기술에 투자하고자 함.
 - 본 기금에서 △시민 및 기업 지원에 635억 유로 △건물 효율성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에 607억 유로 △수소경제 개발에 186억 유로 △e-모빌리티 개발에 138억 유로 △철도 인프라 투자에 125억 유로가 편성됨.
 - 이 중 2024년에만 216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리모델링 및 신규 건설, 「재생에너지법」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를 포함한 e-모빌리티 개발, 철도 인프라 투자, 반도체 생산 지원, 수소경제 개발, 에너지 집약 기업의 전력비용 부담 경감 등에 활용할 예정임.
- [대중국 전략]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7월 13일 사상 최초로 포괄적 대중 전략을 의결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움.²²⁾
 - 64페이지에 달하는 대중 전략 문건은 중국을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며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 국제질서 변경 시도, 사이버보안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 한편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자임을 명시하여, 무역, 통상, 투자 등의 분야에서 유대관계를 이어가지만 첨단 전략산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대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decoupling)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경감(de-risking)을 추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함.²³⁾

18)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3. 9), “Joint Economic Forecast Autumn 2023.”

19) 한겨레(2023. 4. 20),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삐걱...‘신호등 연정’ 내 이견 여전.

20) Politico(2023. 10. 8), “Far-right surge upends German state elections.”

21) Bundesregierung(2023. 8. 9), “Milliardeninvestitionen in Energiewende, Klimaschutz und Transformatio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tf-sondervermoegen-2207614>(검색일: 2023. 10. 16).

22)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2023. 7. 13), “Strategy on China,” <https://www.auswaertiges-amt.de/blob/2608580/49d50fecc479304c3da2e2079c55e106/china-strategie-en-data.pdf>(검색일: 2023. 10. 24).

23) AP news(2023. 7. 13), “Germany presents long-awaited strategy on China, stresses economic security.”

- 단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은 상황에서 수출입 다변화 노력은 기업에 생산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정치권이 제시한 대중국 전략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은 크지 않은 편임.²⁴⁾
- [EU 차원 산업정책 주도] 독일은 EU 역내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주도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음.
 - EU는 최근 「유럽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연달아 제안하여 EU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²⁵⁾
 - 한편 역외보조금규정, 경제적 강압 대응조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등을 통해 무역규범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을 지님.²⁶⁾

■ [성장기회법 발표] 2023년 8월 연방정부는 독일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기회법안(Wachstumschancengesetz)」을 발표함.²⁷⁾

- 「성장기회법안」은 △독일의 경쟁력 강화 △세제의 현대화 및 간소화 △조세 형평성 개선으로 구성됨.
 - 독일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후보호 투자에 대한 투자 보너스 제공, 유동성 개선을 위한 감가상각 도입, 주택 건설 시 감가상각률 규제 간소화, 연구 부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및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세제의 현대화 및 간소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면제, 전자 데이터 전송 활성화, 기부 절차에서 보조금 수혜자 등록의 디지털화, 원천징수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조세 형평성 개선: 국경간 조세제도 보고 시 국내 과세정보 포함 의무 확대, 투자자금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전자계산서(e-Invoice) 의무화 규정 도입, 금리상한제 조정 및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본 법안은 11월 연방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임.

■ [숙련노동자 유치] 숙련인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6월 「전문인력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을 제정함.²⁸⁾

- 「전문인력 이민법」은 숙련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거주법(Aufenthaltsgesetz)」을 일부 변형시킨 것으로, 해외 숙련노동자의 자격, 경력, 잠재력에 대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숙련노동력의 독일 노동시장 편입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독일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임.
 - 본 법의 3대 특징은 △자격: 학위 소지 시 어떠한 숙련 직무라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고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녔고 출신국의 전문자격을 기취득한 경우, 독일에서 재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잠재력: 독일어/영어 능력, 경력, 독일과의 연계성, 연령, 파트너/배우자 동반 이민 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기회카드(Chancenkarte)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모색 기회를 제공하는 점임.²⁹⁾

24)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Henning Effner 소장 인터뷰(2023.4.21.)

25) 오태현(2023. 7),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2-23.

26) EC 웹사이트, Anti-subsidy investigations,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investigations_en(검색일: 2023. 10. 23).

27) Die Bundesregierung(2023. 8. 30), "Milliardenschwere Entlastungen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achstumschancengesetz-2216866>(검색일: 2023. 10. 16).

28) Bundesregierung, "The new Skilled Immigration Act at a glance," <https://www.make-it-in-germany.com/en/visa-residence/skilled-immigration-act>(검색일: 2023. 10. 23).

- 이 외에도 독일에서 발행하는 EU 블루카드의 최소 소득요건을 연간 4만 3,800유로로 낮추되(기존 연간 5만 8,400유로) 일손이 부족한 특정 직군(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IT 전문가)은 최소 소득요건의 45.3%까지 낮춰 허용하고, 학위가 없더라도 다른 자격 증빙이 가능하다면 EU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³⁰⁾
- 이 법은 2022년 10월에 발표된 숙련노동자 확보전략(Fachkräftestrategie)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 숙련노동자 확보전략은 △노동시장 진입생 교육 실시 △전 연령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훈련 제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노동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직무품질 및 직무환경 개선 △해외 숙련노동자 유치를 위한 이민법 현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³¹⁾
- 단 독일의 인재유치 경쟁력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높지 않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임.
 - OECD의 숙련인력 대상 인재유치지수(Talent Attractive Index)에 따르면 독일의 종합순위는 38개국 중 15위, 구직기회 순위는 26위, 성장가능성은 22위로 순위가 낮은 편임.³²⁾

■ [독일 협약] 2023년 9월 올라프 숄츠 총리는 더 빠르고, 현대적이며, 안전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일 협약(Deutschland-Pakt)’을 제안함.³³⁾

- 독일 협약은 △재생에너지, 광섬유, 수송망 건설 등을 위한 조속한 승인절차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디지털 거주변경 등록 등을 통한 행정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숙련인력 확대 및 비정규 이민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³⁴⁾
 - 앞서 소개한 「성장기회법」, 기후변화기금 등은 독일 협약의 계획안에 포함되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액세스법(OZG)」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됨.
- 숄츠 총리는 독일 협약을 제시하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현재 독일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함.³⁵⁾
 - 독일 협약은 연립정부가 최근 경기침체 및 에너지 전환정책,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원전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하여 숄츠 총리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전력 네트워크 및 수소 경제가 빨리 자리를 잡을수록 의구심을 더 빨리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29) 기회카드 제도는 독일 입국 후 직업을 찾는 해외 노동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점수제 기반의 거주권 제도임. <https://se-legal.de/chancenkarte-auf-enthaltserlaubnis-zur-arbeitssuche-vereinfachung-der-erwerbsmigration/>(검색일: 2023. 10. 23).

30) EU 블루카드 제도는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역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역내 노동허가 제도임. <https://www.apply.eu/BlueCard/>(검색일: 2023. 10. 23).

31) Bundesregierung(2022. 10. 12), “Fachkräft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Neue Wege zur Fachkräftesicherung,”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strategie-2133284>(검색일: 2023. 10. 23).

32) OECD Talent Attractive Index 2023, <https://www.oecd.org/migration/talent-attractiveness/>(검색일: 2023. 10. 27).

33) Die Bundesregierung(2023. 9. 6), “Der Deutschland-Pak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land-pakt-2221564>(검색일: 2023. 10. 16).

34) Bundesregierung, “Der Deutschland-Pak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land-pakt-2221564>(검색일: 2023. 10. 16).

35) Bundesregierung(2023. 9. 16), “Kanzler im Interview mit der Welt am Sonntag: Neues Wachstum durch technologische Innovation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interview-bundestkanzler-wams-2223876>(검색일: 2023. 10. 16).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고로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각각 28%, 20.4%로, 영국(9.4%), 프랑스(10.7%), 미국(11.1%, 2021년 기준) 등 여타 선진경제권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그림 15 참고).

그림 15. 2022년 OECD 회원국 제조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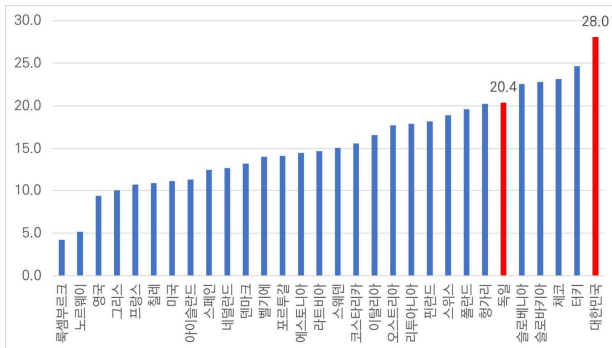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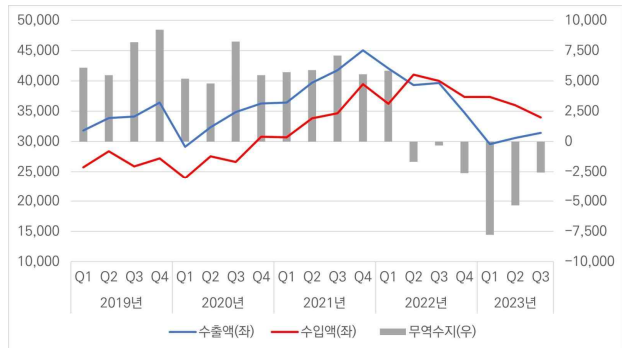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전체 경제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미국은 2021년 자료. 아일랜드는 제외함.
자료: OECD Data 저자 재가공.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재가공.

-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역액(수출+수입) 비중은 96.5%로, 독일(99.9%)과 매우 유사하며, 중국은 한국과 독일 양국 모두에게 최대 교역 국가임.³⁶⁾

- 독일은 2000년대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던 데 반해 한국은 2022년 초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22년 2/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음(그림 16 참고).
- 독일과 한국은 수입, 수출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2022~23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0%로 독일(63.8%)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한국의 출생률이 급감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가 빠른 편임.³⁷⁾

- 독일은 2000년대 급격한 고령화를 겪다가 최근 정체된 반면, 한국은 2010년대부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그림 17 참고).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2022년 0.78명)으로, OECD 주요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그림 18 참고).³⁸⁾

36) 전체 교역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21.9%, 독일 22.7%로 거의 동일함.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독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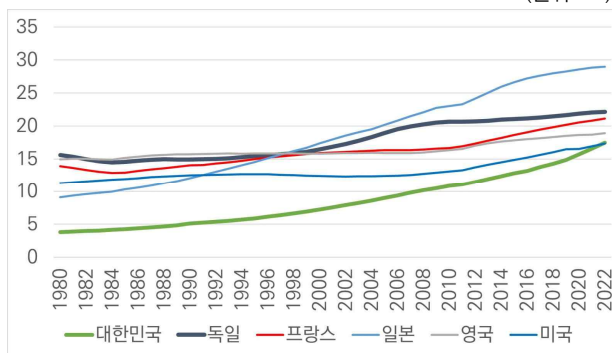
37) OECD Data, Working age population, <https://data.oecd.org/pop/working-age-population.htm#indicator-chart> (검색일: 2023. 10. 25).

38)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사이 가임기 여성 1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이민자 유출입이 없을 경우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이 되어야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함.

- 한국의 경제구조가 독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부진이 장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해가는 한편,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독일 및 EU의 경제안보 전략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이민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함.

그림 17. 2022년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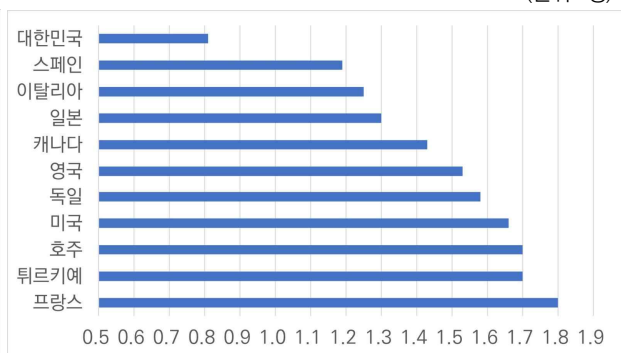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의미함.
자료: OECD Data 저자 재가공.

그림 18. 2021년 주요국 합계출산율

(단위: 명)



주: 합계출산율은 15~49세 사이 가임기 여성 1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자료: OECD Data 저자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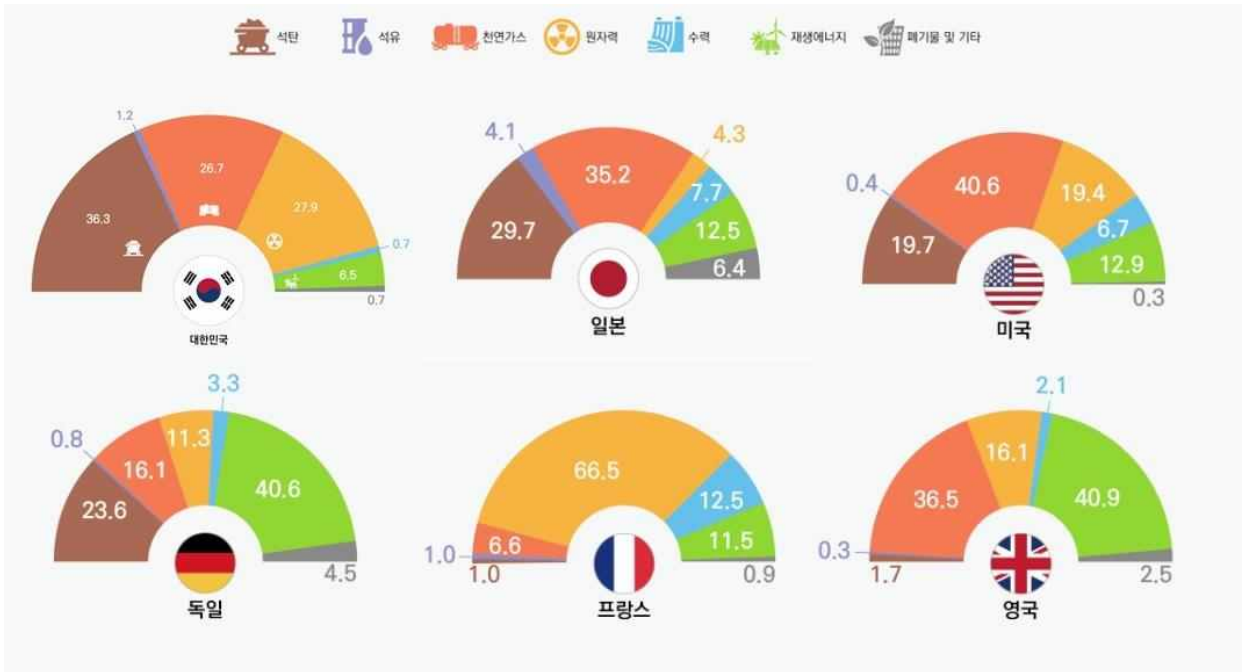
■ [에너지 전환]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3%로, 독일(4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올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로 확대할 계획임.³⁹⁾
 -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그림 19 참고),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친환경 기술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 및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 원전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갈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원전 분야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39) 2020년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1년 발표한 NDC 상향안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원전 비중이 증가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36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참고.

그림 19. 2020년 주요국 에너지 믹스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2022. 4. 21), 「주요 국가의 2020년 에너지믹스 [인포그래픽]」 중 발췌.

■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해외로부터 숙련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함.

- 팬데믹 이후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경색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일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2022년부터 각종 행정조치를 통해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함.⁴⁰⁾
 - EU는 인재풀 시범사업(Talent Pool Pilot),⁴¹⁾ 인재파트너십제도(Talent Partnerships)⁴²⁾ 등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역외 국가와 숙련 부문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려 함.
 - 우리나라 역시 고용허가제 입국자 규모를 지난해 6만 9천 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현행 2천 명에서 3만 5천 명까지 대폭 증가시켰음.⁴³⁾
- 외국인력 유치를 활성화하여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비숙련 외국인력 직업 훈련 제공, 유학생 자원 활용,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 등의 정책과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노동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EP

40) Pew Research Center(2022. 1. 11), "Key facts about U.S. immigration policies and Biden's proposed changes,"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2/01/11/key-facts-about-u-s-immigration-policies-and-bidens-proposed-changes/>(검색일: 2023. 10. 23).

41) EC, https://eures.ec.europa.eu/eu-talent-pool-pilot_en(검색일: 2023. 10. 23).

42) EC, 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migration-and-asylum/legal-migration-and-integration/talent-partnerships_en(검색일: 2023. 10. 23).

43) 한겨레(2023. 9. 26), 「오고 싶은 나라 '주식회사 대한민국'」.